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하급심 유죄'로 개정

“이재명 방탄용” 목소리 전준위 속도전에 의총서 격론 최고위원 경선 등 영향 줄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타나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노영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인사는 "사실상 당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당헌 개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최고위원

경선 등 지도부 선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당원과 시민에 활짝 열겠다”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 이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이병훈(광주 동남·사진) 의원은 16일 "광주시당의 문을 당원과 시민을 향해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바꾸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을 담아 '당원 중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당의 당무를 당원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시당 홈페이지 개편, 정례

적 회계 보고, 시당 사무처 실명제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 광주에서 정치개혁연대가 구성되는 등 당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진 데 대해선 "정치개혁은 누가 나오든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개혁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시당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을 '비명'과 '침명'의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민주당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 하는데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정치공학적 해석을



위해 갈라치기를 하는데 시당위원장 선거는 실제로 그런 구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당위원장 선거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합의를 거쳐 추대된 이병훈 의원과 당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가 후보로 내세운 최희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가 출마했다.

시당위원장 경선은 전국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해 합산하며 오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쌀값 하락 지속시 농민소득 1조4000억 감소 우려”

서삼석 국회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 지속시 농민소득 1조4000억여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된 현재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t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4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 '서해 피격' 수사 2라운드 시작

박지원·서훈·서욱 등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박 전 원장 "망신주려는 것"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기록 삭제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개인 수첩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사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

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물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발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 "자택 압수수색은 검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개혁한 나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